

지역혁신 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의 방향과 과제

정 종 영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사무관

I. 들어가는 말

지난 해 말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을 거치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로서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고, 참여정부 출범 후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대해서 많은 논의와 고민을 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을 3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대학과 지방문화 육성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정부는 지난 4월 9일 성경급 위원장을 비롯하여 각 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된 11명의 당연직 위원과 11명의 민간 임명직 위원 등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했으며, 4월 15일 중앙부처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처별 정책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4월 24일에는 대통령을 모시고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산업자원부는 3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국가균형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보고하고, 이를 위해 국장을 단장으로 '국가균형발전추진단'을 발

족하여 관련 실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만큼, 여기서는 산업자원부의 주요 정책현황과 방향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II. 지방대학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대학의 공동화현상 심화

최근 지방대학의 위기론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몇 가지 현상으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우수한 학생이 지방대학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기존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수도권으로의 편입이 확산되어 지방대학의 미충원율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2003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은 모집정원 36만여 명 중 35,681명이 미충원되어 9.4%의 미충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156개 전문대는 28만여 명 중 50,172명이 미충원되어 17.6%의 미충원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 현상

〈표 1〉 지역별 4년제 대학의 2003년도 미충원 현황

지역별	전북	전남	광주	제주	경북	경남	경기	서울	전국 합계
미충원인원(명)	6,384	3,515	4,526	759	5,099	2,863	725	625	35,681
미충원율(%)	26.4	25.5	23.7	21.3	15.8	14.1	2.0	0.8	9.4

*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은 지방으로 갈수록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표 1〉 참조).

둘째, 지방대학 교수들의 수도권으로의 이탈이다. 이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지방대학의 열악한 연구환경에 이어, 학문의 후계자인 대학 및 대학원생들의 이탈에 따른 악영향으로 분석될 수 있다. 지방대학 교수들의 이동은 지역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술과 지식의 생산원천이 고갈되고 있다는데서 대학의 미충원과 더불어 매우 심각한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 지방대학의 재정적 위기이다. 전통적으로 대학운동을 재단의 투자나 외부 기부금보다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해 왔던 대학들이, 신입생 감소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당수 대학들이 존폐의 걱정까지 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신입생 미충원율과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지방대일수록 불가피하게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한국대학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1년도 사립대학 전체 기부금 총액 8천879억 원 중 67.2%인 5천964억 원이 상위 20개 대학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중 수도권 대학이 14개로 나타나 있는데, 지방대학의 재정위기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지역혁신 주체로서의 지방대학의 역할 미흡

대학은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이후 빠르게 양적으로 팽창하였고, 특히 지방대가 수도권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교수 1인당 학생수는 2002년 4월 현재 지방대학이 41명으로 수도권 대학의 38명보다 많은 등 교육여건이 질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다(〈표 2〉 참조).

〈표 2〉 2002년 현재 대학 및 재적학생 수 현황

구분	학교 수			재적학생 수(단위: 천 명)		
	전문대	대학	대학원	전문대	대학	대학원
수도권	51	66	483	345.9	439.0	147.9
(%)	(32.1)	(40.5)	(51.1)	(35.9)	(24.8)	(56.3)
비수도권	108	97	462	617.2	1332.7	115.0
(%)	(67.9)	(59.5)	(48.9)	(64.1)	(75.2)	(43.7)
계	159	163	945	963.1	1771.7	262.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 교육통계연보

〈표 3〉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

구분	사업목적 및 내용	추진 연도
특성화 공대 육성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의 주요 거점 대학을 특성화 공대로 지정 학생 정원 증원, 우수 교수 초빙, 재정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 	1973~1993
국책지원 공과대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산업 권역별로 우수한 공과대학을 엄선·특성화하고 집중 지원하여 우수한 교육중심 공과대학을 육성 지역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급산업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산·학·연 협동을 통한 지역의 산업 기술발전을 뒷받침 	1994~1998 (2000억 원)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을 통해 투자 효율성 증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공급 및 산업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산·학 협동 활성화 	1997~2001 (780억 원)
지역우수대학 육성사업(BK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및 지역대학의 교육 연구 내실화 	1999~2005 (3208억 원)
지방대학 자체사업 계획 평가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대학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2002~ (500억 원)

〈표 4〉 지역별 생산 및 고용 현황(2001년)

구분	지역총생산 (서울=100)	취업자 (서울=100)	취업자 천 명당 대학졸업자(명)	전문/기술/관리 취업비중(%)
수도권	220	214	10	25.0
비수도권	248	243	12	13.7
총계	468	456	11	19.0

* 자료 : 지역소득계정,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육통계연보

〈표 5〉 대학 입학정원과 지원자 변화 추이

(단위 : 명)

구분	'95	2000	2001	2002	2003	2005	2009	2010
고졸(예정)자 (A)	671,614	764,712	736,171	670,713	593,643 (고3)	598,958 (고1)	623,843 (초등6)	693,216 (초등5)
대학 입학 정원								
대학(B)	287,253	354,668	357,318	365,682	367,226	367,226	367,226	367,226
전문대(C)	218,580	303,060	301,360	302,754	302,754	302,754	302,754	302,754
계(D)	505,833	657,728	658,678	668,436	669,980	669,980	669,980	669,980
탈락자(A-D)	165,781	106,984	77,493	2,277	△76,337	△71,022	△46,137	23,236

* 자료 : 국가인력수급 중장기 계획 정책보고서(교육인적자원부, 2002)

지방대학은 그 동안 지역혁신 주체인 산업계,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70년대부터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 이공계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해 온 것이 사실이다(〈표 3〉 참조).

그러나 일부 지방대학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막대한 투자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마다 산업 및 경제적 환경에 차이가 있고 비교우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이 수도권 대학과 학과, 교과목 등 동일한 교육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생산 및 고용 현황을 보면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취업자 1,000명당 신규 대학졸업자수는 수도권지역이 10명, 비수도권지역이 12명으로, 고용규모에 비하여 대졸인력의 배출규모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높다. 반면, 대졸자들이 선호하는 전문/기술/관리직의 취업비중을 보면, 수도권지역이 25%로 비수도권지역의 13.7%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비수도권지역에서의 대학의 인력공급과 산업계의 인력수요 간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위와 같은 결과는 그 동안 지방대가 지역산업과 긴밀한 상호작용하에 발전하지 못하고 독자적인 성장논리에 의해 확대되어 왔다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핵심역할 또는 촉매작용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주의 깊게 분석해야 될 것이다.

Ⅲ. 지방대학 공동화 및 부실화의 원인

1. 대학의 양산과 진학생 수의 감소

대학이 공동화되어 가는 것은 시장의 논리에 의

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파악해야 한다. 즉, 공급측면인 대학의 수와 정원이 양적으로 확대된 반면, 출신율의 감소로 인해 수요측면인 고등학생 수가 감소하게 된 것이다(〈표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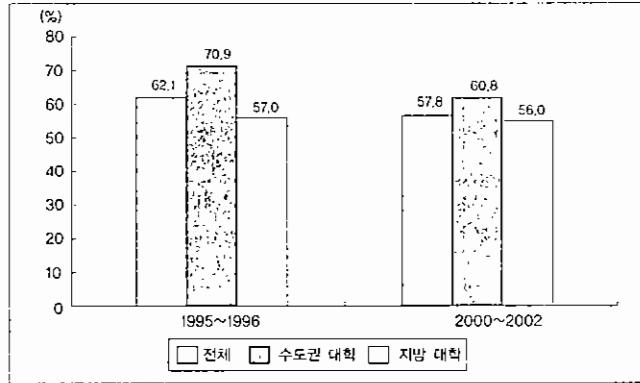
대학생 수에 대한 수급이 괴리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대학이 피해를 더 입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IMF 이후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악화된 것도 학생들의 지방대학 외면현상을 가속화시켰다. 따라서, 대학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일부 대학에서부터 정원감축과 대학간 흡수 합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방대학 졸업생의 극심한 취업을 악화

지방의 고등학생이 지방대를 외면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들거나 지방대생이 편입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방대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수도권에 비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최근에 수도권대학과 지방대간의 취업률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이는 외환위기 이후 경력직 선호로의 채용관행의 변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대생의 취업 어려움은 우수한 학생들의 탈지방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지방대생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악순환의 주원인은 수도권으로의 경제적 집중과 대기업을 비롯한 산업계의 수도권대학 출신 선호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우수학생의 지방대 회피는 실력있는 지방대학 교수들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의지를 무력화시키고, 교수들마저도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자료 : 교육통계연보

(그림 1) 대학졸업자의 취업률 현황

(표 6) 수도권 및 대전지역의 연구개발비 및 인력 비중 현황

구분	1996	1998	2000	2001
연구개발비 비중	79.8%	74.8%	75.2%	75.0%
연구인력 비중	67.5%	62.7%	66.1%	68.5%

* 자료 : 과학기술 연구활동 조사보고

(표 7) 지역별 연구개발비 및 인력 비중 현황

(단위 :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구개발비	22.3	1.3	1.5	2.7	1.1	12.4	1.7	37.7	0.6	2.1	3.1	1.1	0.9	5.0	6.4	0.2
연구인력수	30.1	4.2	2.6	3.3	1.8	9.9	1.8	25.2	2.4	2.7	3.4	2.5	1.5	3.8	4.3	0.4

* 자료 : 2002년 과학기술 연구활동 조사보고

(표 8) 1995~2002 산업기술 관련 지방대학 지원 현황

(출연금 단위 : 억 원)

지역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합계
총계	과제수	256	351	505	603	857	918	1046	1270	5806
	출연금	186	397	609	488	678	833	1153	1543	5887
비수도권 대학	과제수	107 (42%)	166 (47%)	227 (45%)	281 (47%)	399 (47%)	450 (49%)	534 (51%)	605 (48%)	2769 (48%)
	출연금	70 (38%)	138 (35%)	190 (31%)	228 (47%)	332 (49%)	452 (54%)	653 (57%)	828 (54%)	2,891 (49%)

* 자료 :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TP제외), e-Biz대학지원사업, 전력 인력양성사업, 지역산업진흥(9개 지역산업)

(표 9) 부처별 지역기술혁신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사업명	주관 부처	사업 내용
산업기술단지 (Techno-Park)	산업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2003년간 6개 시범 TP 조성에 1500억 원 지원(송도, 안산, 충남, 광주·전남, 대구, 경북) - 포항 및 부산은 지자체 스스로 구축 • 2003년 2단계 TP 확산대책 추진(150억 원)
지역기술혁신센터 (TIC :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산업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 지역별 기술혁신센터 구축에 필요한 장비를 연간 10억 원씩 5년간 지원 - 대학은 설치공간 및 운영비를 부담 • 1995~2002년 35개 TIC 설치(2003년 300억 원)
신기술창업보육사업 (TBI : Technology Business Incubating)	산업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보유 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1억원 내외 지원(2003년 160억 원) • 1995~2002년간 1259명의 신기술사업자 지원
디자인혁신센터 (DIC : Design Innovation Center)	산업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로 디자인 개발 및 인력양성 센터를 구축하고 3년간 15억 원 내외 지원 • 현재 11개 DIC 운영 중
지역협력연구센터 (RRC : Regional Research Center)	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과 지방대학의 연계 육성을 위해 대학에 센터를 구축하고 연구비로 9년간 매년 5억 원씩 지원(현재 53개 RRC 운영 중)
과학연구센터 (SRC : Science Research Center)	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과학 분야 육성을 위해 대학에 센터를 구축하고 장비구축비 및 연구비로 9년간 매년 10억 원씩 지원(현재 29개 센터 운영 중)
공학연구센터 (ERC : Engineering Research Center)	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기술연구를 위해 대학에 센터를 구축하고 장비구축비 및 연구비로 9년간 매년 10억 원씩 지원(현재 40개 센터 운영 중)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영업지원을 위하여 S/W 사업자와 지원시설을 집적하고 기술개발 용자자금 우대(현재 21개 센터 구축)

3. 지방 및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의 미흡

지방대학이 실질적인 지역혁신의 촉매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대학이 재단의 투자는 물론이고 정부의 투자에서도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표 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01년 수도권 및 대전지역의 연구개발비 집중도는 75%이고, 연구인력의 집중도는 68.5%로서, 그 동안 정부의 연구개발, 기반구축 등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수도권 등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최근 들어 연구개발비의 지역 편중현상은 다소 완화되고 있는 반면에, 연구인력의 편중현상은 외환위기 이후에 오히려 심화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산업화 위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성격상 기업과 연구소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대학의 참여율이 낮아, 2002년 산업기술 개발 출연 예산 8천억 원 중 대학에는 1200억 원이 지원되었다(<표 8> 참조).

4. 지역산업과 연계되지 않은 물량 위주의 투자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을 위한 역할이 충분치 못했던 것은 기존의 지원위주의 정책이 지역산업의 현실과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대학 교수를 위주로 한 단편적 지원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산업, 지방대학, 지방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 핵심 주체 간의 상호 연계를 통한 자생적 발전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키워 준 결과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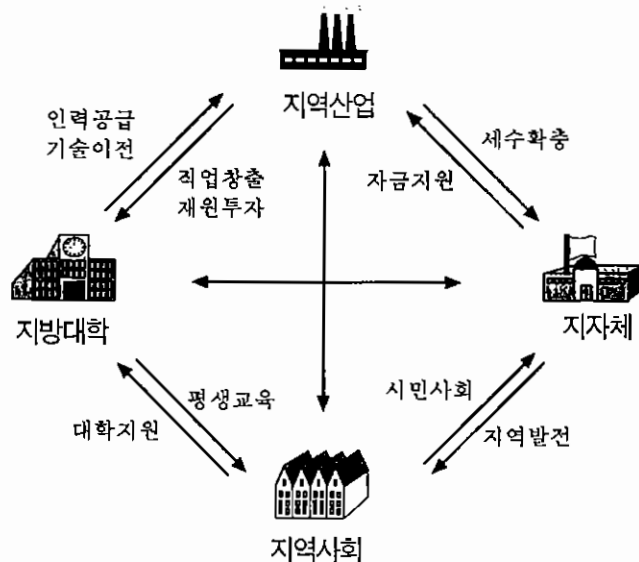
5. 중앙정부 위주의 중복 및 분산 투자

그 동안 중앙정부의 지역 및 지방대학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인 발

전전략이나 미래비전을 통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 부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분산되어 추진되어 왔다. 이는 그나마 부족한 지역 및 지방에 대한 투자가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들은 중복 가능성에 대한 시비를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표 9) 참조).

Ⅳ.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과 지방대학

지방대학 육성의 정당성은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및 경제의 발전을 통해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곧 지방대학이 해당 지역 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양성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지역산업이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교



(그림 2) 지역혁신 체제와 지방대학의 역할

육체계 개선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지방대학이 없는 지역산업은 있을 수 없고, 지역산업이 없는 지방대학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산업의 현실과 여건, 발전방향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 더불어, 지방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및 문화, 지역에 대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적 연계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그림 2 참조).

V.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 정책방향

1. 지방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

현재의 지방대학의 규모와 체제는 대학입학 지원자가 넘쳐나던 시절에 형성된 구조로서, 지원자보다 정원이 많은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간의 경쟁, 지방대학 간의 경쟁, 국립과 사립 간의 경쟁 등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의 퇴출, 인수·합병을 통한 비교우위 확보 등 시장의 원리에 따른 자율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2002년 10월 영산대(4년제)가 성심외국어대(전문대)를 통합한 사례, 2000년 공주대(4년제)가 공주문화대학(전문대)를 통합한 사례, 지난 4월 한일장산대의 2004년 정원 감축발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을 제고

그 동안 대학 또는 교수들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 지방대 육성책들이 지방대의 내실화 또는 활성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물론, 지방대생의 양적·질적

인 취업을 향상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대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혁신 거점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

지역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지방대생의 취업지원 또는 공공부분의 고용할당 등 적극적 Affirmative Action 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민간기업에 대한 고용할당제는 경제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3. 지역산업과 지방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

지방대학이 지역혁신의 촉매제로서 역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방대학만에 대한 지원 또는 지역산업만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은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지도 못하고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산업체-대학-연구소 간 지역혁신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지역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지방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체계의 구축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및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종합

“

지방대학 육성의 정당성은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및 경제의 발전을 통해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곧 지방대학이 해당 지역 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양성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지역산업이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체계 개선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

적으로 정책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역단위에서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기구(RDA)를 통한 집행단위의 조정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Ⅵ. 산업자원부의 세부 정책방안

1. 지방대학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충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 및 지방대에 대한 국가 R&D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가 R&D 투자의 지방에 대한 투자비율을 2001년 20.6%에서 2007년 40%로 확대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비율로 2001년 8.5%에서 2007년 20%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연구기반 구축 및 R&D 예산을 2002년 828억 원에서 2007년 73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지역산업과 연계된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2. 지방대학의 이공계 교육체계를 지역산업에 맞게 개편 유도

지방대학이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업종별 수급 현황에 대한 정량적·정성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교육통계, 노동통계 등 공급부문 중심으로 통계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자원부는 지역별·업종별 산업의 발전전망과 이에 따른 인력수급을 전망하고, 수요측면에서 필요한 인력의 유형과 자질을 도출하여 학과별 정원, 교육방법 등 대학의 교육체계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급변하는 산업현황에 따른 인력수요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구축된 Techno Park와 함께 인력수급통계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대학의 공학과목, 교육체계 등이 산업현장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공학교육 인증사업'과 우수한 공학교육체계를 D/B로 구축하여 대학에 제공하는 '공학교육 연구

센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학 졸업생들의 창의성과 실무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Capstone-Design 사업을 2002년 5개 대학에서 2003년 20개 대학으로 확대 추진하고, 향후에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3. 지방대학과 지역산업과의 연계강화

지방의 산·학·연 연계를 통해 지역혁신체제의 기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지역별로 8개가 구축되어 있는 '테크노파크(TP)'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전략산업의 기획·조정, 연구개발-생산-기업지원서비스간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서비스 기능을 TP에 부여하기 위하여 단지조성 위주의 '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을 '지역기술혁신촉진법' 체제로 개정 작업중에 있다.

그리고 대학별로 구축되어 있는 '지역기술혁신센터(TIC)'가 실질적으로 지역혁신역량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신규센터 선정시 지역진흥계획 및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2002년 현재 35개인 TIC를 2007년까지 70여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3년부터 신규로 추진 중인 '지역전략산업 석박사연구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있는 분야의 산·학 협동 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004년부터는 지원폭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상기 사업은 올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100여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평가중에 있는데, 709개팀이 지원할 정도로 지방대학과 기업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업이다. 지방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산업기술의 지역산업으로의 이전을 통해 지역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보유기술 이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TP를 지방의 연구기관-대학-기업을 연계

한 지역기술 이전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4.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 지원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6개월에서 1년까지 전문 연구소의 연수 및 관련 기업의 현장훈련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산업기술 연구현장 교육연수사업'의 연수기관 및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취업률 제고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에 확대 구축되는 TP에 연구개발 기능을 확충하고, 전자부품연구원(구미), 광기술원(광주) 등과 같이 지역진흥사업 추진시 관련된 연구원을 지역 내에 설치하여 지방대 졸업 우수 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5. 지방 및 지방대학 지원체계 개선

중앙정부 위주의 지원으로 인한 지역 현실과의 괴리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역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과 지역 차원의 집행조정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산업자원의 지역산업 진흥 및 기술정책,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정책, 과학기술부의 지방 과학기술정책 등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수단에 대해서 총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책간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정된 정책들이 집행단계에서 분리되어 추진되기보다는 지역 단위에서도 총괄조정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것이 정책효과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중앙정부 지원사

“

현재 지방대학의 공동화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인위적인 단기적 지원책에 의해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부는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대학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업 예산을 지역별 총괄조정기관에 집중 배정하여 지방 및 지방대학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총괄조정기관은 지방대학·연구소·기업 등이 참여하여 지역별로 설치될 '지역발전기구(RDA)'에 그 역할을 맡겨야 할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과 '지역전략산업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이미 지역별로 설치된 TP에서 1차 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중앙에서는 중복성만 검증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 지방 및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Ⅶ. 맺는 말

현재 지방대학의 공동화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인위적인 단기적 지원책에 의해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부는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대학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대학의 육성 문제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

혁신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산업진흥정책과 긴밀한 연계하에 추진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가 클 것이다.

지방대학이 지역혁신의 촉매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허약해진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과거와 같이 지방대학에 대한 물량위주의 지원은 지양되어야 하고, 지역산업과 함께 자생적 지역혁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 및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전략하에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정책조정, 지역차원에서의 집행조정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전략수립 및 정책조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고, 지역차원의 집행조정은 '지역발전기구(RDA)'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문**

정종영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다.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 행정정보담당관실, 반도체진기과 등에 근무하였으며, 현재 산업기술정책과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다.